

# 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법' 추진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후보 추천위서 복수후보 추천

###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개월 남아... 다양한 의견 반영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 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안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과정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시행되는 데 반해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법원장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추천위원으로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달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원에서 제

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일교육외교대책위원회 의원들과 국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역사교과서 왜곡 철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일에 조공 바치고 뺨 맞아" 대일외교 국조 착수

### 교과서 왜곡 비판... 원전 오염수 방출·위안부 문제 등 청문회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비난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정상회담 등을 겨냥,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차용으로 돌아왔다"며 "무능 대처로 열령똥방 넘길 요량

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폭주를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천불이 날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래 최고위원은 "박정희-전두환보다 더 폭압적이고, 이명박보다 더 탐욕적이고,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내 생애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나라를 팔아먹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뺨까지 맞은 것이냐"며 "양국 정상이 만난 지 고작 1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당내 대일 교육외교 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일 정상화

담 직후 드러난 건 더욱 충격적"이라며 "굴욕외교, 굴욕외교의 결과물이 고작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이나"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왜곡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일 교육외교 국정조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유관 상임위원회의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로 ▲ 제3차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 선(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법사위,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

### 여야, 전체회의 개최 합의... '김건희 특검'은 합의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9일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인 등 3건"이라고 밝혔

다. 기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있을 수 있다"며 "법사위의 고유법이므로 이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형배 '민주당 복당' 다음달 가닥

### 20일 이후 탈당 1년... 당헌·당규상 신청 가능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의 민주당 복당 문제가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다음 달 20일이면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1년째 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다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한 풀 꺾일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선 다음 달 20일 이후, 민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면 내부 심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여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민 의원에 대해 복당을 요청하는 사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위해 탈당한 민 의원을 곧바로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현재가 민 의원 '탈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뒤, 민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

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해 법안 처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현재는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당 안팎의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 선불리 복당을 결정했다가는 현재의 지지를 외면하는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내심 서운한 기색이지만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복당을 원하지만 지금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당에서 복당을 요청한다면 그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 의원의 복당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현재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유감을 표하고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